

정보화사회 걸림돌제거가 시급하다



禹 光 浩
(한국경제신문 뉴미디어국장)

1991년은 정보통신의 새 時代가 시작되는 첫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속에서만 전개되었던 정보화사회의 그 모습도 정부와 업계가 함께 그림을 그리는 元年이 될 것이다.

체신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정보통신사업육성계획을 발표했다. 그 계획의 핵심은 미래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세계적인 서비스교역의 자유화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체신부는 국내 정보통신사업이 대외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각종 지원체제를 갖추겠다고 했다.

이는 그동안 여러가지 이유로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발목을 묶어 놓고 있던 전기통신 및 전자분야의 규제조항들을 과감히 개선하여 민간업계의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정보통신의 대외개방이 눈앞에 다가와 있지만 이에 대비한 국내의 경쟁력은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정부대로, 또 업계는 업계대로 질머지게 된 과제들이 더욱 많아졌다.

정보화사회로 가는 길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체신부는 우선 정보통신과 관련된 각종 법규의 재정비를 더욱 서둘러 정보화사회의 걸림돌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

정보통신과 정보산업의 민간부문의 활성화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크게 좌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

각종 법규의 재정비를 서둘러

정보화사회의 걸림돌을 제거해 나가야.....

.....

지금 까지 한국통신(舊 KTA)과 한국데이터통신 그리고 한국이동통신 중심의 사업독점화체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용단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발생될 수 있는 3개회사의 부분적인 수익감소도 나라전체의 정보산업 발전이라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정보통신은 데이터통신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국내개방을 늦춘감도 없지 않다. 그 때문에 이 부분의 제3자투자도 억제당해 업계전체가 더욱 바빠졌다.

정부가 “1가정 1단말기” 정책을 표방한지가 오래되었지만 단말기는 민간부문에서 일부가 보급되어 있을 뿐이다.

그 단말기마저도 접속할 수 있는 통신회선이 마땅치 못한것이 현실이다.

지금 전국에 거미줄처럼 깔려있는 통신선은 음성통신을 위한 회선이기 때문에 데이터통신에는 문제가 많다.

정부는 이 부문에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이 부문에 민간투자도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펴야 한다.

상반기중에 민간VAN사업자에 허용되는 국제VAN서비스와 단순전송 및 회선재판매 서비스는 민간부문의 정보통신활성화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이 부문이 활성화되면 모든 민간부문의 Data 통신이 한국통신의 PSTN(일반전화망)과 연결, 기본통신의 근본적인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

다.

따라서 한국통신은 기본 통신쪽의 새로운 수입원이 개발되는 것이다.

이제 체신부는 이에 대처, 한국통신의 이 부문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게 해야한다. 이와함께 민간쪽의 Network사업도 적극 도와야 한다.

그리고 전화선의 품질향상에 전력을 투구해야 Data통신이 제자리를 찾고 Data통신의 수요창출도 가능해진다.

통신회선의 보완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DB의 구축이다.

현재 국내의 DB산업은 걸음마도 못하는 유아기이다.

정보활용 여건도 되어있지 않으며 정보에 대한 가치인식과 이용능력도 없는 상태이다. 물론 유용한 DB도 몇개 안되고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도 초기적 단계이다.

일부 관련자료에 따르면 DB의 양적인 규모가 88년을 기준으로 미국의 DB 4천여개에 비해 우리나라는 상용화될 수 있는것이 겨우 50여개로 80분의 1 수준이고 일본의 5백여개와 비교하면 10분의 1정도로 원시적상황이다.

DB와 관련된 각종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다. 하드웨어 자체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DB쪽의 S/W부문은 더욱 힘겹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1960년대말에 이미 통신성이 기본적인 기술을 언론사와 공동개발형태를 취하며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했다.

취약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민간업계에 길을 터 주는데 서슴치 말기를……

또한 일본전신전화공사(NTT)가 민간업체와 공동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온라인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기초를 다졌다.

한자단말기의 제작도 정부의 지원으로 등장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일본의 표준사양까지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이와같이 DB산업은 초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한 부문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시작단계인 DB산업쪽에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요구된다.

S/W부문은 특히 정부의 관심이 시급하다. 기초가 단단해야 발전의 가능성은 커진다.

DB의 기초부분 투자는 정부가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통신개방에 따라 해외의 DB들이 국내시장에 몰려올 것이 예상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우리의 DB마저 외국의 H/W와 S/W에 의존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다.

우리의 Data가 상당부분 지금도 해외에서 외국어로 처리되어 넘어오고 있다. 이는 마치 50~60년대에 텅스텐 원석을 헐값에 수출하고 비싼 값으로 텅스텐을 수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보통신에는 국경이 없다. 이대로 2~3년후엔 해외의 DB가 국내시장을 장악하게 될 소지도 있다. 그리하여 우리의 Data도 해외DB의 일부 Data로 결방살이를 해야 하는 모양을 갖출 수도 있다.

미국과 일본의 DB업계가 취약한 한국DB를 겨냥, 본격적인 진출을 꾀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

지고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국내 DB산업 발전에는 한계가 있다.

하나의 특정 DB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시간 그리고 막대한 투자가 소요된다. 그러나 상당기간 투자의 회수는 불가능한 것이 DB이다.

수익성이 기대 안되는 사업에는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는 것이 기업의 생리이다.

최근 대기업들이 정보산업에 관심을 갖고 너도나도 관련팀을 구성하여 가동시키고 있으나 정보산업의 기본이 되는 DB는 거론을 하지 않고 있다. 사업성도 없고 전문가도 없기 때문에 DB는 기업들의 관심밖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같이 취약한 부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관련 법령과 법규도 기초가 되고, 소외된쪽을 도울수 있게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이제 법령과 법규가 정보화사회를 막고 있다는 이야기를 민간업계로부터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정부보다 앞장서서 뛰고자 하는 민간업계를 돕고 길을 터주는 작업에 서슴치 말아야 정보산업의 도약도 가능하다.

또한 정보사회와 정보산업을 누가 주도하고, 나만이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버리고 민과 관이 함께 서로를 도우면서 정진해야 미래의 정보화 사회도 이룰 수 있다. ……………■